

[경제]

반도체·디스플레이 '한국 연합군' 뛴다

삼성전자·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간 협력으로 기술 개발

정부 차원 추진…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

차세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재료·장비 등 첨단분야 원천기술을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국내 핵심 대기업간 연계를 통해 개발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갈수록 격심해지는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차원을 넘어 지금까지 경쟁관계로만 존재했던 삼성전자-하이닉스, 삼성전자-LG필립스LCD 등 해당 분야의 대기업들이 정부를 매개로 공동 기술

개발에 나서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15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차세대 기술개발 체계를 개선, 대기업과 대기업간 공동 기술개발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이 구체화 단계에 진입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넘어 경쟁관계인 대기업들이 기반 기술을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반도체의 경우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가 공동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업체간 공동개발 협력을 대상으로 꼽고 있는 분야는 ▲비메모리 분야 반도체 시스템 설계 ▲장비재료 및 공정기술 공동개발 ▲차세대 반도체 개발분야 등이다.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기업간에 상용화 단계의 기술 공동 개발은 어렵지만 원천기술과 산업 인프라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한국의 혁신산업 전반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정부가 대기업간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분야는 연구개발(R&D) 분야”라고 지적하고 “올해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기술 개발체계를 기능별 체계에서 산업별 체계로 바꿔 대·대기업간 협력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이런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디스플레이 분야의 대기업간 협력은 반도체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분야의 협력은 액정 디스플레이 분야의 삼성전자와 LG필립스 LCD, 플라즈마 패널 디스플레이(PDP) 분야의 삼성SDI, LG전자가 산업의 기

반이 되는 원천기술은 물론, 디스플레이 산업의 인프라이나 일본·미국 등에 크게 열세인 장비·재료업체의 공동육성에 나서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빠르면 5월께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업체와 장비·소재업체 등이 참가하는 디스플레이 산업협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스플레이 산업협회 출범에 맞춰 김영주 산자부 장관이 김순태 삼성SDI 사장과 이상완 삼성전자 LCD총괄 사장, 권영수 LG필립스LCD 사장, 강신익 LG전자 디지털 디스플레이 사업본부장 등과 만나 디스플레이 산업분야의 대기업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디스플레이 산업은 수출이 200억 달러를 넘어 한국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며 “지금까지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수준을 넘어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간 협력 체계 마련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퇴직연금 예금보호

최대 1억원까지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퇴직후 일정 연령(55세 이상)에 달한 때부터 연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도 예금자 보호대상에 포함돼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일정 한도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퇴직연금의 예금보호법에는 퇴직연금 적립금 중 기존의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대상 예금을 제외하고 추가로 5천만 원을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최대 1억원까지 보호받게 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예금보호법 치를 조만간 확정, 관련 업계 공청회 및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에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로운 이달중 예금보험위원회와 이사회 심의를 마치고 내달 이후 공청회를 거쳐 재정부와 예금자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을 협의할 방침이다.

예보는 최근 금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퇴직연금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퇴직연금의 예금보호 법위가 일반 예금에 비해 대폭 확대된 것은 퇴직연금이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근로자들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동일 세대 재당첨 금지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공공택지 아파트에 당첨됐을 때만 적용해 온 동일 세대 재당첨 금지 조항이 9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아파트로 확대될 전망이다.

재당첨 금지 조항은 동일 세대에 속한 세대원이 당첨됐을 경우 나머지 세대원의 당첨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실시하도록 돼 있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월부터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 대해 청약가점제로 주택 당첨자를 선정하도록 하기 위해 주택 공급규칙을 이달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의 핵심은 지난달 공청회에서 발표한 대로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가입기간 등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의 점수를 산정해 주택 청약에 높은 점수의 가입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해외유학·연수 경비 급증 외국인 국내유학의 '27배'

우리나라 사람의 해외 유학경비가 외국인 국내 유학경비의 27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서비스

수지, 예산이 가능하다’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1인당 해외유학·연수경비가 외국인의 국내유학·연수경비가 27.2배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해외유학·연수는 단순한 소비지출이 아니라 무형자산 투자지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수

지의 적자 자체를 문제라고 할 수는 없으나 내국인 해외유학과 외국인 국내유학간에 1인당 경비격차가 극

심한 것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이로 인해 지난해

수경비가 급증하면

서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1인당 해

외유학·연수경비가

외국인의 국내유학·

연수경비의 27.2배까지 확대됐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해외유학·연수는 단순한 소비지출이 아니라 무형자산 투자지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수

지의 적자 자체를 문제라고 할 수는 없으나 내국인 해외유학과 외국인 국내유학간에 1인당 경비격차가 극

심한 것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이로 인해 지난해

수경비가 급증하면

서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1인당 해

외유학·연수경비가

외국인의 국내유학·

연수경비의 27.2배까지 확대됐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해외유학·연수는 단순한 소비지출이 아니라 무형자산 투자지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수

지의 적자 자체를 문제라고 할 수는 없으나 내국인 해외유학과 외국인 국내유학간에 1인당 경비격차가 극

심한 것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이로 인해 지난해

수경비가 급증하면

서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1인당 해

외유학·연수경비가

외국인의 국내유학·

연수경비의 27.2배까지 확대됐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해외유학·연수는 단순한 소비지출이 아니라 무형자산 투자지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수

지의 적자 자체를 문제라고 할 수는 없으나 내국인 해외유학과 외국인 국내유학간에 1인당 경비격차가 극

심한 것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이로 인해 지난해

수경비가 급증하면

서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1인당 해

외유학·연수경비가

외국인의 국내유학·

연수경비의 27.2배까지 확대됐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해외유학·연수는 단순한 소비지출이 아니라 무형자산 투자지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수

지의 적자 자체를 문제라고 할 수는 없으나 내국인 해외유학과 외국인 국내유학간에 1인당 경비격차가 극

심한 것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이로 인해 지난해

수경비가 급증하면

서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1인당 해

외유학·연수경비가

외국인의 국내유학·

연수경비의 27.2배까지 확대됐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해외유학·연수는 단순한 소비지출이 아니라 무형자산 투자지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수

지의 적자 자체를 문제라고 할 수는 없으나 내국인 해외유학과 외국인 국내유학간에 1인당 경비격차가 극

심한 것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이로 인해 지난해

수경비가 급증하면

서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1인당 해

외유학·연수경비가

외국인의 국내유학·

연수경비의 27.2배까지 확대됐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해외유학·연수는 단순한 소비지출이 아니라 무형자산 투자지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수

지의 적자 자체를 문제라고 할 수는 없으나 내국인 해외유학과 외국인 국내유학간에 1인당 경비격차가 극

심한 것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이로 인해 지난해

수경비가 급증하면

서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1인당 해

외유학·연수경비가

외국인의 국내유학·

연수경비의 27.2배까지 확대됐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해외유학·연수는 단순한 소비지출이 아니라 무형자산 투자지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수

지의 적자 자체를 문제라고 할 수는 없으나 내국인 해외유학과 외국인 국내유학간에 1인당 경비격차가 극

심한 것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이로 인해 지난해

수경비가 급증하면

서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1인당 해

외유학·연수경비가

외국인의 국내유학·

연수경비의 27.2배까지 확대됐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해외유학·연수는 단순한 소비지출이 아니라 무형자산 투자지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수

지의 적자 자체를 문제라고 할 수는 없으나 내국인 해외유학과 외국인 국내유학간에 1인당 경비격차가 극

심한 것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이로 인해 지난해

수경비가 급증하면

서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1인당 해

외유학·연수경비가

외국인의 국내유학·

연수경비의 27.2배까지 확대됐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해외유학·연수는 단순한 소비지출이 아니라 무형자산 투자지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수

지의 적자 자체를 문제라고 할 수는 없으나 내국인 해외유학과 외국인 국내유학간에 1인당 경비격차가 극

심한 것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이로 인해 지난해